

<제 50 호>

2021 년 11 월 1 일

(홈페이지: <https://kascn.org/>)

● **이민개혁법안 속보: 하원 예산조정안에서 서류미비자 영주권 취득 조항 삭제**

간밤에 안좋은 소식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원 예산조정안에서 서류미비자 영주권 취득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민개혁을 위한 싸움이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백악관과 의회에 천 백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구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을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1 월 4 일 현재 하원에 상정되기 직전인 예산조정법안의 이민법 관련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랜 A 와 플랜 B 는 빠지고 플랜 C 로 대체되었습니다.
- 플랜 A 에서 합법체류자들이 벌금내고 일찍 영주권 신청하는 조항과 플랜 B 에서 레지스트리(Registry) 자격 입국 날짜 변경으로 1/1/2011 년 이전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플랜 C 는 인도적 입국허가(Humanitarian Parole) 입니다. 이것의 혜택은 다카처럼 10 년간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고 추방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은 시민권자의 가족 등 극소수에게만 허용 됩니다.
- 과거 미사용 비자를 재사용하는 조항은 포함 되었습니다.

민주당내 입장이 갑자기 바뀐 이유는 상원 조정관의 반대, 민주당내 중도파의 반발, 버지니아 주지사 패배 등 예상보다 중간 선거 결과, 보수 지역구 주민들의 반이민 정서, 이민법 보다는 전체 예산안(Buy Back Better Bill)을 살려야 된다는 주장 등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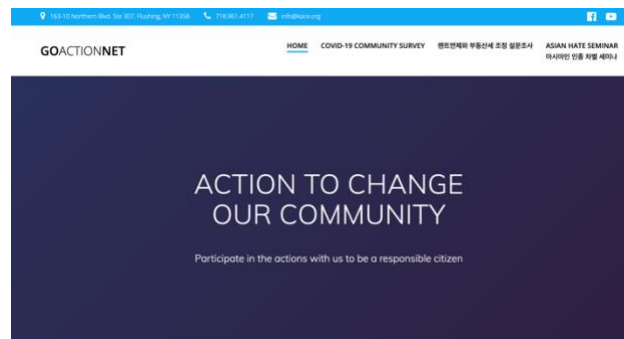
민주당내 진보진영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 **이미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

위의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아래 goaction.net 에 가시면 바로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oaction.net/>

이 온라인 서명운동은 이름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서명자의 지역구 의원사무실로 본인의 이름으로 편지를 팩스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아무리 많은 서명용지를 가져가도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주민의 서명만 확인을 합니다. 또 연방의원들의 경우 자기 지역구에서 200 여명 이상의 서명을 가져가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사무실로 주민의 편지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주소의 지역구 주민들 서명을 받고 추후 그 리스트를 가지고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워싱턴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이 온라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께는 위의 서명 방법으로는 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부통령께는 아래 세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1) 전화로 본인 이름과 주소를 말하고 영문 편지를 읽어서 음성 메시지로 남긴다.

202-456-1111

- 2) 영문편지 내용을 copy & paste 해서 백악관에 직접 우편으로 보낸다.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 3) 영문편지 내용을 copy and paste 해서 백악관 공식 사이트에 있는 이메일 양식을 사용하여 보낸다.

<https://www.whitehouse.gov/contact/>

- 서면 운동과 함께 보내질 편지 내용

Dear President Biden, Vice President Harris, Senate Majority Leader Schumer, and House Speaker Pelosi:

I write this letter to you today to express that you must provide the pathway to citizenship for undocumented immigrants through reconciliation this year.

Immigrants mobilized millions of voters to elect Democrats who now control the Senat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White House. We expect you to use every tool at your disposal and deliver on your promise of a Build Back Better Act that includes a pathway to citizenship.

The Parliamentarian works for elected officials, not the other way around. According to 2 USC Sec. 644, her advice against including pathway to citizenship in reconciliation bill is a non-binding advisory opinion. As 92 law professors and 23 Democratic members of House of Representatives recently explained in a public letter that the Presiding Officer, Kamala Harris, has the final authority to decide whether to include the immigration provision in the reconciliation bill and that it should not be seen as an overruling of anyone. Rather, it would recognize that elected members of Congress are ultimately responsible for deciding whether to enact legislation.

In denying any possible pathway to citizenship, the Parliamentarian, an unelected official, is denying the huge economic impact of such legislation and the tributes that millions of undocumented individuals have paid to this country.

This is a critical moment for our nation's history, and I strongly urge you to use your authority to disregard the Senate Parliamentarian's ruling and provide the pathway to citizenship to immigrants who are essential to this country.

News Letter

Respectfully,

(Name)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슈머 상원 다수당 대표, 펠로시 하원 의장 귀하:

저는 오늘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시민권 취득의 길을 포함한 이민법안이 예산조정법안에 포함되길 촉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많은 이민자들은 지난해 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하였으며 그 결과로 상원, 하원 그리고 백악관을 민주당이 장악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공약한 대로 서류미비자들의 시민권 취득의 길을 예산 법안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상원 조정관은 선출직 의원들을 위해 일합니다. 그 반대 가 아닙니다. 연방규정에 의하면 조정관이 이민법 조항을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한 판정은 구속력이 없는 조언이자 의견입니다. 최근 92 명의 법대 교수들과 23 명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서한에서 밝혔듯이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민법 조항을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결정자 입니다. 이것은 선출직 의원들이 법제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출직이 아닌 조정관의 거부 판정은 이민법 조항이 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과 이민자들이 미국에 기여해온 바를 무시하는 잘못된 처사 였습니다.

지금은 미국 역사의 중요한 시기 입니다. 저는 귀하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 상원 조정관의 의견에 상관없이 미국에 필수적인 이민자들을 위한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름)